'진퇴양난' 빠진 이주열… 금리 올릴수도, 놔둘수도

집값 급등·가계부채 생각하면 '인상'
고용 부진·기업투자 생각하면 '동결'

금융시장 "금리인상 시기 이미 놓쳤다"
글로벌IB, 한은 10月 금리 인상 전망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열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집값 급등, 가계부채 증가, 한·미 간 금리 격차 등을 생각하면 이미 금리를 올렸어야 하지만 고용 부진, 기업 투자 감소, 소비 둔화 등 지지부진한 경제 상황을 보면 선뜻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압박하고 있지만 물가가 생각 만큼 오르지 않으면서 금리 인상 명분마저 약해진 상태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폭탄까지 터지면서 정부와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9%' 달성도 장담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3일 이낙연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발언에 다음 날인 14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1.960%로 전일 대비 3.9bp(1bp=0.01%포인트) 올랐다.

이 총리는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 양쪽의 고민이 있다"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했다.

현재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후 연 1.50%로 10개월째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금리 인상 당시 한은은 "대출금리를 1%포인트 올려도 가계와 기업 모두 감내할 수 있다"며 경제 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불과 1년도 안 돼 상황은 바뀌었다.

올해 들어 투자, 소비, 고용은 역주행했다. 경기 둔화로 경제성장률은 전망치를 밑돌았다.

경제 성장의 한 축이었던 투자 부문이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지난 4일 한은이 발표한 '2018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국내총투자율은 31%로 전기(31.4%)보다 0.4%포인트 감소했다.

2분기 설비투자액은 39조126억원으로 전기 대비 5.7%나 줄었다. 감소율만 따지면 2016년 1분기(-7.1%)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건설투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기 대비 2.1% 줄어든 62조35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반기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하는데 머물렀다. 이는 한은이 7월 내놓은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2.9%)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이 3000명에 그쳐 8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7월 취업자수 5000명에 이어 더욱 악화된 수준을 기록하면서 '고용쇼크'는 2달 연속 계속되고 있다. 이미 설비·건설투자가 악화된 상황에서 고용부진은 소비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트럼프발 '관세 폭탄'까지 터지면서 연 2.9% 성장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정부와 한은은 올해 상반기 2.9%, 하반기 2.8% 등 올해 2.8%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지난 7월 당초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내린 바 있다.

지난 17일 미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오는 2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같은 날 중국은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대해 5~10%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맞대응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졌다.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를 이미 놓쳤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급등하고 가계부채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생각하면 이미 금리를 올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 악화가 걱정되고 그렇다고 계속 묶어둘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JP모건, 씨티, 노무라, 바클레이스, HSBC 등 글로벌 IB(투자은행)는 한은이 이런 딜레마 상황에도 10월이나 11월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무라는 "한은이 금융 불균형 및 주택시장과열을 타개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긴 하지만 정부 당국이 얼마 전 새롭게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평가할 때까지 기다려 볼 것"이라며 금리 인상 시기를 11월로 점쳤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G2 무역분쟁 격화… 韓증시 떠나는 외국 자금

코스피 약보합세·코스닥 소폭 하락 마감
외국인, 이달에만 1.4兆 주식 순매도 중

G2(중국·미국) 무역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9월과 12월에 금리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자금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된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외국인 자금 유입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상승 동력을 잃은 한국 증시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약보합세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소폭 하락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투자심리가 악화된 영향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는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3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4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한 후, 연말 또는 내년 1월부터 25%로 올릴 예정이다. 중국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산 제품 600억달러에 대해 5~10% 보복관세 부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외국인 자금은 신흥국 시장을 떠나 달러 등 안전자산으로 향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자 18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미국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0.13% 오른 94.64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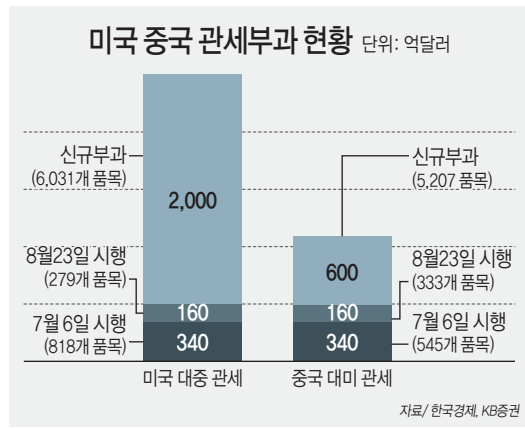
아울러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달에만 1조 4000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다. 지난 8월 1조6528억원 순매수세에서 바로 매도세로 돌아선 것이다.

금리 인상 우려도 외국인이 자금 유입을 망설이는 요소다. 미국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블룸버스 기준 99.8%다. 문제는 12월이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12월에도 추가 인상을 결정하면 한국과 미국은 1% 금리차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를 유도한다. 외국인 자금은 통화가치가 높을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금 유출을 우려해야하는 상황이다.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도 기대할 수 없으니 투자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해 미국의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서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만 114억5000만달러(약 12조 8000억원)를 투자했다. 이는 국내 증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외국인 자금의 관망세는 짙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미국과 중국이 관세 인상 카드를 모두 소진한데다 무역분쟁이 오히려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는 점이다.

유동원 키움증권 글로벌전략팀 이사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다. 하지만 무역분쟁이 오히려 달러 강세를 유인해 금리인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과 시장의 흐름이 맞지 않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 시장에 대한 매수 판단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외국인 투자자금은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전후에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후 외국인은 순매수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때 증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과 중국은 관세인상 카드를 모두 소진했다"면서 "무역분쟁 우려가 이미 증시에 다 반영돼 있어 향후 무역 분쟁으로 인한 자본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윤석헌 금감원장, 외국계 금융사 간담회 참석

"불합리 규제 완화할것… 도약 기회 되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취득한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성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금융시장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외국계 금융사에게도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가 글로벌 금융산업의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으로 자리매김 했다"며 "모든 영업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를 살피고,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반성장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윤 원장은 "최근 남북경협 가능성이 커지면서 동북아 금융중심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외국계 금융사에도 값진 도약의 기회가 되고 외국계 금융회사와 한국 금융시장 간 동반 성장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24개 외국계 금융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은행권, 사회적 경제기업에 1718억 공급

사회적금융 추진을 위해 은행권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총 1718억원의 자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지난 4월 개최된 제1차 사회적금융 협의회에서 마련한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사회적금융협의회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라 당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주로 관계기관의 개별과제 추진현황 점검 및 사회적금융 데이터베이스(DB) 등 인프라 구축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회적금융 추진을 위해 은행권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총 1718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이는 지난해 총 지원 실적인 2527억원의 68.% 수준이다. 하반기에도 자금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총공급규모는 작년보다 약 20~3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현재 사회적금융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